IDAP INSTITUTE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JAMS JOURNAL OF ADVANCES IN MILITARY STUDIES

2026, Vol. 9, No. 2, 97-117.

https://doi.org/10.37944/advmil.9.2.202610.005

A Study on the Inhibitory Factors of Fast-Track Decisions: Focusing on the Grounded Theory Paradigm Model

Yang Myeng-Hee* · Jeong Seokjae** · Kim Jang-Yeop***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mechanisms behind the few Fast-Track decision cases and the regression to standard acquisition procedures using Grounded Theory methodology,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defense Fast-Track system.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were conducted based on in-depth interview data from 15 defense experts represent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Joint Chiefs of Staff, Army/Navy/Air Forc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nd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Defense Technology Planning and Advancement. The analysis revealed that ambiguity in Fast-Track designation criteria and the burden of audits/regulations act as causal conditions, while TRL verification uncertainty and conservative budget reflections act as contextual conditions, leading to the central phenomenon of "sluggish Fast-Track decisions and loss of institutional differentiation." The core category derived from the selective coding analysis is "the generalization of Fast-Track caused by responsibility-averse risk response." This refers to a defensive coping mechanism where working-level personnel and decision-making bodies surrender their discretionary power under Fast-Track and make a conservative retreat to the safest standard acquisition process due to the structural pressure of bearing full accountability for post-audits, allegations of favoritism, and technical failure risks. This phenomenon was verified to manifest through four main causal pathways: (1) audit/administrative burden type, (2) technical distrust/performance gap type, (3) system/budget estrangement type, and (4) responsibility-avoidance/procrastination type. To resolve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s customized policy alternatives, including clarifying post-audit exemption conditions, completely omitting reporting procedures to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s after requirement decisions, applying flexible evolutionary ROC, introducing simplified TRL fast-track verification, establishing dedicated reserve funds and budget tracks for Fast-Track, and building a top-down policy responsibility-sharing system.

www.kci.go.kr

Keywords : Fast-Track, Grounded Theory, Generalization of Requirements, Policy Responsibility Sharing, Paradigm Model

* (First Author) Joint Chiefs of Staff (Ph.D. Student, Kwangwoon University), mhyang45@gmail.com, https://orcid.org/0009-0000-4496-204X
** (Second Author)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Kwangwoon University, sjjeong@kw.ac.kr, https://orcid.org/0000-0001-7081-7567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Kwangwoon University, jykim1670@kw.ac.kr, https://orcid.org/0000-0001-7258-3928

www.kci.go.kr

Ⅰ. 서론

세계 주요국의 군사적 패권 경쟁과 4차 산업혁명 기반 첨단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국방획득 환경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AI), 무인 자율체계, 드론, 우주기술 등 민간 분야에서 주도하는 첨단 신기술의 기술수명주기는 과거 십 수 년 단위에서 불과 수개월 단위로 단축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우수한 성숙기술을 적기에 발굴하여 군 전력으로 신속하게 도입하는 '획득의 속도(Speed of Acquisition)'가 군사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우리 국방 부문 역시 기존 일반소요 중심의 경직된 획득 절차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첨단기술을 조기에 전력화하기 위한 제도인 '신속소요(Fast Track)'를 도입하였다. 신속소요 제도는 민간의 기술성숙도(TRL)[1]가 높은 체계를 대상으로 사전 절차를 과감히 단축 또는 생략함으로써, 소요결정부터 전력화까지의 순차적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적 당위성 아래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취지와 법률적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방획득 현장에서의 신속소요 결정 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사전개념연구[2]를 수행한 총 16건의 대상 사업 중 사전검토 단계에서 신속 전력화 추진 가능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9건에 달했으나, 실제 실무 검토 및 소요기획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신속소요 결정에 도달한 사례는 단 1건(6.25%)에 불과하다. 절차 간소화와 신속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신속소요 제도가 정작 현장에서는 기존 일반소요 절차로 회귀하거나 검토 지연 끝에 무산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관행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 국방획득 관련 선행연구들은 조직, 예산, 절차, 법령 등 획득체계 전반의 발전 방향과 신속획득·첨단전력 도입 방안을 다각도로 포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법·제도적 당위성 제안, 단편적인 절차 개편안 작성, 또는 해외 획득제도의 규범적 벤치마킹에 치중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규범적 접근 방식은 제도를 실제로 운용하는 핵심 주체들(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육·해·공군, 민간방산업체)이 법적·행정적 규제 및 감사 리스크 속에서 어떠한 방어적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3]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신속소요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질적 저해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현장 전문가 인터뷰 및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거쳐, 신속소요 제도가 현장에서 '일반소요화'되는 복합적 메커

1)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 기술의 성숙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TRL 7~8 단계는 시제품 성능 검증이 완료된 단계를 의미한다.

2) 사전개념연구: 소요제기기관의 신규 전력소요에 대한 소요제기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체계 필요성, 운영개념, 작전운용성능, 전력화지원요소, 대안분석(AoA) 등에 대해 수행하는 연구(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조).

3) 근거이론(Grounded Theory): 경험적 현실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 질적 자료로부터 연구 문제를 탐색적·발견적으로 추출하고 조직화하여 실체적 이론을 도출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Glaser & Strauss, 1967; Strauss & Corbin, 1990; Charmaz,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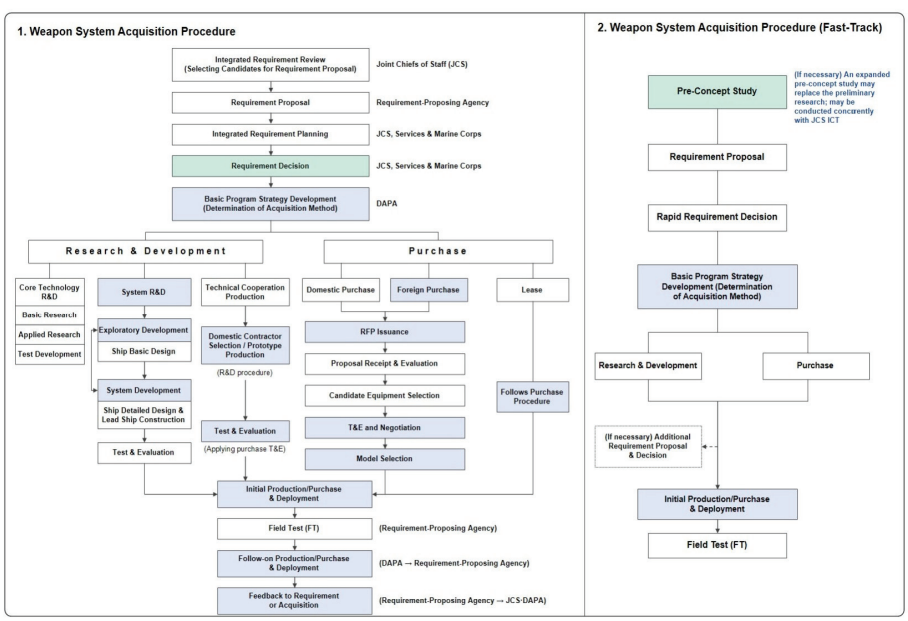
www.kci.go.kr

니즘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2.1 신속소요 신설

전통적인 국방획득체계는 소요결정부터 전력화까지 평균 7～10년 이상이 소요되어, 기술수명주기가 짧고 진화 속도가 빠른 민간 첨단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적기 수용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 왔다. 특히 소요기획 단계에서 설정된 작전운용성능(ROC)[4]이 고정됨에 따라 전력화 시점에는 이미 기술적 진부화가 발생하거나 안보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획득의 시차(Acquisition Lag)' 현상이 구조화되었다.



〈Figure 1〉 Weapon System Acquisition Procedure[5]

4)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군사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획득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운용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능 수준과 능력을 제시한 것으로, 주요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으로 구별되며 연구개발 또는 국외구매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의 기준이 된다(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5) 출처: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별표 3] '국방전력발전업무 절차도' 참조.

www.kci.go.kr

이러한 경직성을 극복하고 획득 시차를 단축하기 위해 <Figure 1>과 같이 국방부는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기존의 '일반획득절차'와 차별화된 별도의 패스트트랙(Fast Track) '신속획득절차'인 신속소요 제도를 2023년 법제화했다. 신속소요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5년 이내에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대폭 단축·개선하여 첨단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2 신속소요 결정 현황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명시된 신속소요 결정 절차는 '확대된 사전개념연구[6] 수행 ⇨ 소요제기 ⇨ 신속소요 결정'의 단계로 구성된다. 그러나 <Table 1>과 같이 실제 소요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대된 사전개념연구가 수행된 총 16건의 대상 사업 중 사전검토 단계에서 신속 전력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9건(56.3%)에 달했으나, 최종적으로 신속소요로 결정된 사례는 단 1건(6.25%)[7]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사업들은 검토 지연 끝에 중단되거나 다시 보수적인 일반소요 절차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1〉 Implementation Status of Fast-Track Pre-Concept Research[8]

Category		Total	'24년	'25년
Total		**16**	**12**	**4**
Feasible for Rapid Fielding	Subtotal	9	8	1
	Requirement Decision*	0	0	0
	Requirement Proposal	4	4	0
	Discontinued	2	1	1
	Converted to Standard Acquisition**	3	3	0
Not Feasible for Rapid Fielding	Subtotal	5	4	1
	Discontinued	2	2	0
	Converted to Standard Acquisition	3	2	1
Under Pre-Concept Research		2	0	2

* Note 1: Approved at the 367th Joint Chiefs of Staff Meeting (Mar. 23, 2026) for 'Squad-Level Small Self-Detonating Drone' (1 case).

** Note 2: Preliminary research is requested upon conversion to standard acquisition.

6) 확대된 사전개념연구: 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개념연구로, 기술성숙도(TRL) 분석, 비용분석, 제조 가능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수행한다(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조).

7) 최종 소요결정: '25. 12월 기준 집계에서는 소요결정 건수가 0건이었으나, '26. 3월 제36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분대급소형자폭드론' 1건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전체 16건 중 1건(6.25%)의 소요 결정률을 기록함.

8) 출처: 방위사업청('25. 12.), 「신속 전력화를 위한 신속소요제도 개선방안」.

www.kci.go.kr

이러한 결과는 신속소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제 절차적 적용 및 결정 과정에서 신속소요 결정을 저해하고 일반소요로 전환되게 만드는 복합적인 메커니즘과 제도적・운영적 저해요인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국방 신속소요(Fast Track) 제도의 결정 저해요인과 일반소요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신속소요 및 국방획득 관련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 등 획득 생태계 6개 핵심 기관의 전문가 15명을 패널로 구성하여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담보하기 위하여 세부 계급 및 신원 정보는 비공개 처리하였으나, 해당 사업과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전력업무 5년 이상 근무한 핵심 전문가들로 국방부(정책), 합동참모본부(소요결정), 육・해・공군(소요제기・기획), 방위사업청(사업관리), 국방과학연구소(사전개념연구), 국방기술진흥연구소(기술검증) 등 국방획득 전 주기를 직접 주도하는 15명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 각 기관의 현장 시각을 다각도로 반영하였다.

자료 수집은 사후 감사 부담, 행정적 리스크, 조직 내부의 방어적 행동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심리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별 실무자의 내밀한 행동 맥락을 포착하고자 비구조화된 개방형 1:1 심층 개별 인터뷰(1:1 In–depth Interview)를 주된 기법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인터뷰 진행 시 연구자의 사전 인지적 편향을 완전히 차단하고 참여자 고유의 경험적 서사를 도출하기 위해, 탐색 영역에 대한 인위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는 완전 비구조화 질문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의사결정의 고충, 감사 지적에 대한 심리적 압박, 그리고 방어적 행동 패턴의 실체적 내러티브(Narrative)를 어떠한 외적 제약 없이 개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아울러, 근거이론의 절차에 따라 자료 수집과 코딩・분석을 순차적으로 병행하였으며, 15번째 참여자의 인터뷰에 이르러 기존 도출된 범주를 정교화하는 것 외에 새로운 개념이나 하위범주가 더 이상 도출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 상태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표집 및 자료 수집을 완료하였다.

www.kci.go.kr

3.2 근거이론 적용 연구설계

3.2.1 근거이론 방법론의 개념 및 적합성

본 연구에 적용된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사전 설정된 이론이나 가설을 검증하는 전통적인 양적 연구와 달리, 현장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과 실증적 자료(Data)에 기반(Grounded)하여 현상을 관통하는 이론적 모형을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Glaser & Strauss, 1967; Strauss & Corbin, 1998). 근거이론은 사회과학 분야 질적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며 그 학술적 유용성을 입증 받아 왔다(Weick, 2007). 특히 복잡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행위자들이 보여주는 실제 의사결정 패턴과 방어적 행동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규명하는 데 최적화된 연구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 근거이론을 적용하는 학술적·실천적 적합성은 다음 두 가지에 기반한다. 첫째, 2023년 신설된 국방 신속소요(Fast Track) 제도는 도입 초기로 정량적 데이터나 선행 연구가 절대적으로 미비하므로, 가설 검증형 양적 연구보다는 현장 상황을 탐색하고 귀납적으로 이론화하는 접근이 필수적이다. 둘째, 신속소요 결정 저해 및 일반소요 회귀 현상은 단순한 규정 미비보다는 사후 감사 부담, 특혜 시비, 기술적 리스크 등에 반응하는 실무 행위자들의 '방어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주로 기인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내밀한 심리적 맥락과 조직적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이론은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방 신속소요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진의 방어적 후퇴 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Strauss & Corbin(1998)이 제안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3단계 분석 절차를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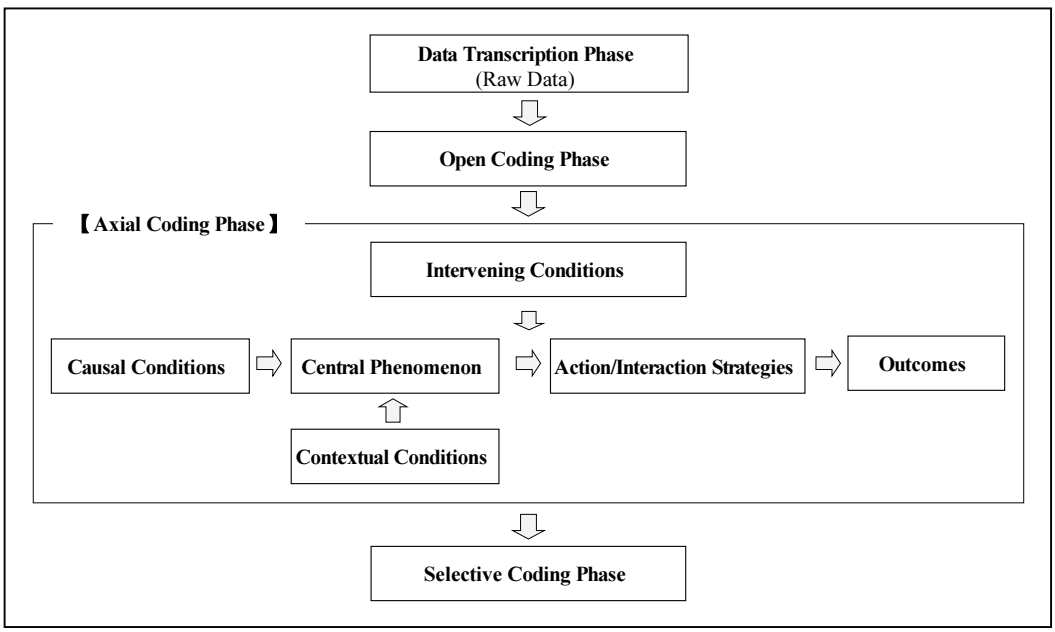
3.2.2 단계별 분석 기법

본 연구는 Strauss & Corbin(1998)이 제안한 근거이론 방법론에 따라 원자료 해체부터 최종 이론 도출에 이르기까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3단계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전체적인 자료 분석의 단계구조는 <Figure 2>와 같다.

3.2.2.1 개방코딩(Open Coding)

개방코딩은 수집된 원자료를 분해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새로운 개념과 범주를 생성하는 단계이다(Corbin & Strauss, 2014). 본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 전사 자료를 줄 단위 및 문장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현장 실무자들의 경험과 인식이 반영된 유의미한 진술들을 의미 단위(Meaning Unit)로 추출하였다. 이어서 추출된 의미 단위를 바탕으로 개념화(Conceptualization) 및 범주화(Categorization)를 수행하였으며, 지속적 비교분석을 통해 유사한 개념들을 재그룹화 하여 속성과 차원에 따라 하위범주와 최종 범주를 도출하였다.

www.kci.go.kr



〈Figure 2〉 Step-by-Step Structure of Data Analysis[9)]

3.2.2.2 축코딩(Axial Coding) 및 패러다임 모형 구축

축코딩은 개방코딩 단계에서 도출된 개념과 범주들을 재조합하여 범주 간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분석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Strauss & Corbin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에 따라 범주 간 유기적・동태적 관계를 도식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심현상인 '신속소요 결정 사례 저조 및 제도의 차별성 상실'을 중심으로, 이를 유발하는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구조적 환경을 형성하는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 행위자의 전략을 제약・촉진하는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이에 대응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 그리고 최종 결과(Outcomes) 간의 동태적 인과관계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하였다.

3.2.2.3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선택코딩은 분석된 모든 범주를 대표하는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도출하고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들을 통합하여 실체적 이론을 생성하는 단계이다(Corbin & Strauss, 2014). 본 단계에서는 핵심범주인 "책임 회피적 위험 대응에 의한 신속소요의 일반소요화"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요인 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현상을 설명하는 범주 간 관계의 통합적 윤곽을 제시하고, 실무자들의 방어적 행동 패턴을 규명하는 4가지 핵심 인과경로(Causal Path)와 학술적 스토리라인을 정립하였다.

9) 출처: 강소라・김효근(2005)의 지식이전 이론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재구성.

www.kci.go.kr

Ⅳ. 연구결과

4.1 개방코딩: 개념 도출 및 범주화

본 절에서는 전문가 심층 인터뷰 자료의 개방코딩을 통해 182개 개념, 37개 1차 범주, 44개 하위 범주, 12개 최종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패러다임 요인별 12개 최종 범주는 <Table 2>, 44개 세부범주는 <Table 3>과 같다.

〈Table 2〉 Open Coding Results (12 Final Categories)

Paradigm	Code	Category	Main Content (Summary)
Central Phenom.	P-1	Generalization of Fast-Track and Loss of Institutional Differentiation	Phenomenon where proposed Fast-Tracks are delayed or fail to connect to final decisions (only 1 out of 16 cases), eroding speed and institutional differentiation from standard and emergency acquisitions[10]
Causal Cond.	A-1	Mismatch in Civil-Military Requirement Levels and Disconnection	Phenomenon where criteria conflict between civilian advanced tech/performance levels, military operational requirements, and research stages, blocking tech application and requirement linkage
Causal Cond.	A-2	Insufficient Fast-Track Justification and Procedural Inconsistency	Phenomenon where the legitimacy of Fast-Track itself (redundancy, ambiguity,[11] improper project selection) and procedural conflicts with related systems become key issues in decision-making
Contextual Cond.	B-1	Fragmented Governance and Absence of Tailored Systems	Structure hindering consistent and rapid decision-making due to fragmented requirement, project, and budget authorities, inconsistent review criteria, and lack of tailored mechanisms
Contextual Cond.	B-2	Structural Limitations in Resource Allocation and Opportunities	Environment where allocable resources and market opportunities are inherently constrained due to absence of dedicated budgets, reduced decision opportunities, tech cycle mismatches, and risk asymmetry
Intervening Cond.	C-1	Fear of Accountability and Defensive Risk Perception	Defensive coping mechanism of actors preparing against post-decision accountability, including failure burdens, favoritism disputes, audit/parliamentary scrutiny controversies, and derivative risks
Intervening Cond.	C-2	Cautious Acceptance Attitude Toward New Introductions	Cautious acceptance attitude caused by a combination of doubts about military utility, lack of justification for new adoption, and non-execution of prior pilot programs[12]

10) 긴급소요: 사변, 해외파병, 적의 침투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시범운용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군 활용성이

www.kci.go.kr

Paradigm	Code	Category	Main Content (Summary)
Strategies	D-1	Defensive Procedural Overload	Mechanism reversing institutional simplification in the field by voluntarily restoring or adding regulations-omittable procedures to cope with audits and verification
Strategies	D-2	Downsizing Project Scale to Meet Exemption Criteria	Response posture self-reducing project scales to meet feasibility study exemption thresholds
Strategies	D-3	Upward Requirement Revision and Regression to Standard Acquisition	Upward Requirement Revision and Regression to Standard Acquisition
Outcomes	E-1	Loss of Acquisition Speed and Residual Administrative Burdens	Outcome where planning is prolonged due to voluntary procedure restoration, and time advantages disappear as administrative, contracting, and verification burdens remain identical to standard acquisition
Outcomes	E-2	Impairment of Fielding Completeness and Contraction of Defense Ecosystem	Outcome resulting in restricted mass production/ fielding and absence of follow-on roadmaps, decreasing civilian industry participation incentives and shrinking defense market scalability

〈Table 3〉 Open Coding Results (44 Subcategories)

Paradigm	Code	Subcategory
Central Phenom.	5-8	Low cases of Fast-Track decision (only 1 case finally approved out of 16)
Central Phenom.	1-2	Weakened speed differentiation compared to integrated requirement planning
Central Phenom.	6-4	Lack of differentiation compared to integrated requirement planning and emergency acquisition
Causal Cond.	4-1	Unrecognized military utility due to lack of TRL in civilian mature technology
Causal Cond.	5-4	Gap between contractor proposal level and military requirement level
Causal Cond.	6-3	Lack of R&D specialized personnel and research infrastructure in civilian advanced tech firms
Causal Cond.	2-2a	Requirement gap between ADD pre-concept research and DAPA basic strategy establishment
Causal Cond.	5-1	Insufficient linkage between military necessity and urgency

확인된 경우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다(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의3).

11) 불명확성: 신속소요로 제기했으나 운영개념 및 ROC가 불분명하여 연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일반소요로 전환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을 포함함.

12) 시범사업: 대상사업 결정 ⇨ 시제품 개발 ⇨ 성능입증시험 수행 ⇨ 성능입증시험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합참은 긴급소요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전력발전업무훈령 제36조의2).

www.kci.go.kr

Paradigm	Code	Subcategory
Causal Cond.	5-3	Redundancy with previously requirement-decided force capabilities
Causal Cond.	5-6	Ambiguous requirements (unclear operational concept and ROC)
Causal Cond.	5-5	Delays and discontinuation due to improper target selection[13] (failing Fast-Track criteria)
Causal Cond.	1-7	Procedural conflict due to selection for MPB feasibility study
Causal Cond.	1-1	Rigidity from statutory amendment (Fielding within 5 years → Fielding within 5 years after budget allocation)
Contextual Cond.	2-1	Dispersion of inter-agency roles and dualization of decision-making systems
Contextual Cond.	3-2	Inconsistency with MPB budget review criteria and restricted budget securing
Contextual Cond.	1-3	Absence of guidelines for establishing Fast-Track tailored basic program strategies
Contextual Cond.	3-1a	Limitations of force improvement funding and absence of dedicated Fast-Track budgets
Contextual Cond.	1-5	Reduced Fast-Track decision opportunities due to application of integrated requirement planning[14]
Contextual Cond.	4-2	Limitations of defense acquisition procedures in responding to rapid tech change cycles
Contextual Cond.	6-2	Asymmetry of risk burden on civilian contractors compared to rapid demonstration projects
Intervening Cond.	7-1	Concerns over project failure and liability burden due to non-execution of pilot programs
Intervening Cond.	7-2	Concerns over favoritism disputes and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audit points
Intervening Cond.	7-3	Burden regarding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reporting and verification procedures
Intervening Cond.	7-4a	Perception of derivative risks resulting from procedure omission/ streamlining
Intervening Cond.	5-2a	Doubts about military utility of contractor-developed systems
Intervening Cond.	5-10	Lack of justification for introducing new requirements and burden of interoperability reviews
Strategies	1-4	[DAPA] Establishment of new Fast-Track basic program strategy template due to self-adjustment burden, despite regulations allowing omission/adjustment[15]
Strategies	1-6	[DAPA] Executing additional cost, institutional, and TRL analyses even after TRL limitation ruling
Strategies	2-2b	[DAPA] Re-executing preliminary research equivalent to standard acquisition due to lack of basic strategy templates[15]
Strategies	5-9	[JCS] Non-execution of parallel ICT analysis/experiments for shortening review periods (sequential execution)[15]

www.kci.go.kr

Paradigm	Code	Subcategory
Strategies	3-1b	Pursuing minimum quantity under 50 billion KRW to bypass feasibility studies
Strategies	8-1a	Pursuing projects centered on small-scale prototype development (Feasibility study avoidance strategy)
Strategies	9-3a	[DAPA] Integration of DT/OT shortens evaluation period, but performance verification burden remains identical
Strategies	4-3a	[User Services] Upward ROC revision and additional performance demands to mitigate failure risks
Strategies	5-7	[User Services] Frequent ROC changes and requirement modifications during pre-concept research
Strategies	7-4b	[JCS] Pursuing requirement decisions centered on safe, standard acquisitions considering risks
Strategies	5-2b	[Contractor] Proposing requirements after internal self-development prior to official military requirement proposals
Outcomes	4-3b	Review period delays and eventual disconnection from final requirements due to upward ROC demands
Outcomes	9-1	Project management burden from lingering statutory compliance duties under tight schedule pressures
Outcomes	9-2	Burden of deriving optimal acquisition methods and contract management due to insufficient review periods
Outcomes	9-3b	Difficulty and burden in completing objective performance verifications within limited timeframes
Outcomes	8-1b	Limitations on large-scale mass production and practical fielding due to small-scale project pursuit
Outcomes	8-2	Decreased participation incentives for civilian contractors due to lack of specificity in follow-on requirement linkage
Outcomes	6-1	Decline in civilian participation incentives and scalability limits of the defense industry ecosystem

4.2 축코딩

4.2.1 패러다임 모형 구축

축코딩(Axial Coding) 단계에서는 개방코딩에서 분해・도출된 범주들을 Strauss & Corbin(1998)의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에 적용하여, 중심현상을 축으로 인과적・환경적・행동적 요인 간

13) 총사업비 규모 제한 미비: 신속소요 선정 시 총사업비 제한 규정이 없어,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이 대상전력으로 선정될 경우 사타 절차 추가에 따라 신속 전력화가 제한되어 소요 미제기 또는 지연・중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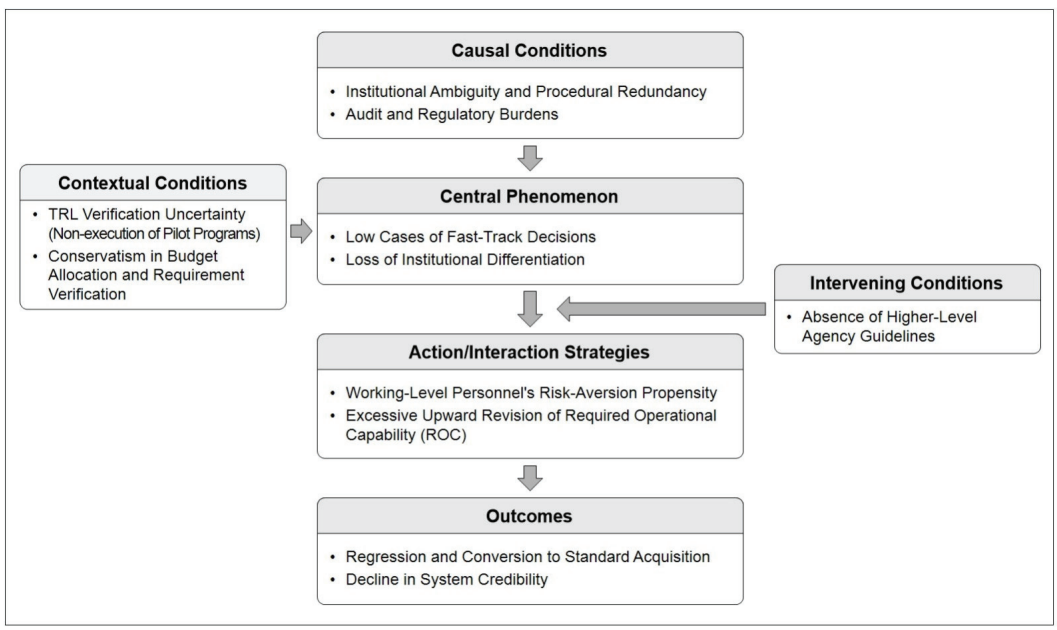
14) 통합소요기획 대상전력: 통합소요검토회의에서 대상전력을 선정, 합동전략회의를 거쳐 F-1년 12월까지 합동 참모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

15) 출처: 방위사업청('25.12.),「신속 전력화를 위한 신속소요제도 개선방안」

www.kci.go.kr

동태적 연계성을 구조화하였다. 이는 파편화된 범주 간 관계를 복원하여 현상을 둘러싼 조건, 대응 전략, 귀결을 종합 설명하는 인과 메커니즘 구축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속소요 결정 사례 저조 및 제도의 차별성 상실'을 중심현상(Central Phenomenon)으로 설정하고, 인과적 · 맥락적 ·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등 패러다임 6대 요소 간의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하였다. 패러다임 요인 간의 상호작용 및 인과 메커니즘은 <Figure 3>과 같으며, 각 요인별 구성 범주와 세부 내용은 <Table 4>에 요약 제시하였다.



〈Figure 3〉 Paradigm Model of Obstacles to Fast-Track Decisions

〈Table 4〉 Axial Coding Results (Paradigm Categories and Main Contents)

Paradigm	Constituent Category	Main Content
Causal Conditions	· Institutional Ambiguity and Procedural Redundancy · Audit and Regulatory Burdens	· Ambiguity in Fast-Track designation criteria · Concerns over post-audits and favoritism disputes · Burden regarding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reporting after decisions
Contextual Conditions	· TRL Verification Uncertainty (Non-execution of Pilot Programs) · Conservatism in Budget Allocation and Requirement Verification	· Military's distrust in unproven contractor technology · Constraints of single-year budget structures and rigid verification practices

www.kci.go.kr

Paradigm	Constituent Category	Main Content
Central Phenomenon	· Low Cases of Fast-Track Decisions · Loss of Institutional Differentiation	· Minimal ratio of final decisions compared to proposed Fast-Tracks · Failure to differentiate from standard acquisition
Intervening Conditions	· Absence of Higher-Level Agency Guidelines	· Inadequate Post-Audit Exemption System · Working-Level Responsibility Burden Structure
Action/ Strategies	· Working-Level Personnel's Risk-Aversion Propensity · Excessive Upward Revision of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ROC)	· Conservative Detour to Safe Standard Acquisition Procedures · Demanding High-Spec ROC to Mitigate Technology Failure Risks
Outcomes	· Regression and Conversion to Standard Acquisition · Decline in System Credibility	· Loss of Fast-Track's Inherent Speed · Rejection and Avoidance of Fast-Track by Proposing Units and Civilian Contractors

〈Table 5〉 Major Causal Path Analysis of the Paradigm Model

Path	Name	Chain Structure	Causal Path Analysis
Path 1	Mechanism of Defensive Procedural Overload	C-1 → D-1 → E-1	Burden of derivative risks such as accountability, BAI audits, and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reporting[16](C-1) leads to voluntary restoration of procedures that are regulations-omittable (D-1). Prolonged planning resulting from restored procedures (E-1) causes the loss of Fast-Track's speed and eliminates the institutional simplification intent in the field.
Path 2	Paradox of Downsizing	B-2 + A-2 → D-2 → E-2	Defensive response of downsizing project scales to under 50 billion KRW (D-2) to evade limitations in Force Improvement funding (B-2) and MPB feasibility studies (A-2). Consequently, large-scale mass production and practical fielding are restricted (E-2), extinguishing participation incentives for civilian contractors.
Path 3	Paradox of Upward Requirement Revision	A-1 + C-2 → D-3 → E-1	Gap between civil-military requirement levels (A-1) and the military's cautious acceptance attitude toward new introductions (C-2) lead to excessive upward ROC revisions and frequent requirement modifications (D-3) to mitigate technology failure risks. Consequently, review periods are prolonged (E-1), ultimately resulting in disconnection from Fast-Track requirements.
Path 4	Regression to Standard Acquisition	C-1 → D-3 (7-4b) → P-1	Perception of accountability and derivative risks (C-1) leads to JCS's decisions centered on safe, standard acquisitions (D-3: 7-4b). This is a key path explaining the numerical empirical result where only 1 case was finally approved out of 9 judged capable of expedited fielding.

16) 국회 상임위 보고 의무: 신속소요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방위사업법 제15조의2).

www.kci.go.kr

4.2.2 패러다임 주요 인과경로 분석

축코딩 단계에서는 패러다임 범주 간 동태적 연계성을 추적하여 신속소요 결정 과정의 4가지 주요 인과경로(Causal Path) 구조를 입증하였으며, 주요 연쇄 구조 및 인과 메커니즘은 <Table 5>와 같다.

4.3 선택코딩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단계에서는 개방코딩 및 축코딩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의 전체 현상을 관통하는 최상위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범주 간 관계의 통합적 기술(학술적 스토리라인)과 4대 핵심 인과경로(Causal Path)를 규명하였다.

4.3.1 핵심범주 도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최상위 핵심범주는 “책임 회피적 위험 대응에 의한 신속소요의 일반소요화”이다. 이는 국방 신속소요(Fast Track) 제도가 지닌 절차 단축 및 신속획득이라는 본래의 규범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진과 심의기구가 감사 지적, 특혜 시비, 결정 후 국회 상임위 보고 부담, 기술적 실패 위험을 전적으로 전가받는 구조적 압박에 직면하면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행위자들은 스스로 신속 절차의 재량권을 포기하고, 가장 안전하며 책임 분산이 용이한 기존 ‘일반소요’의 엄격한 검증 절차로 보수적 후퇴를 선택하게 되는 ‘방어적 위험 대응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된다.

4.3.2 범주 간 관계의 통합적 기술

신속소요 지정 기준의 모호성 · 중복성(A-1)과 사후 감사 · 규제 부담 및 국회 보고 절차(A-2)라는 인과적 조건에, 입증되지 않은 민간 기술에 대한 군의 불신(B-1)[17]과 단년도 예산 구조의 제약 및 보수적 검증 관행(B-2)[18] 이라는 맥락적 조건이 결합하여, 최종 의결 비율이 극소(16건 중 1건)에 그치고 신속성을 상실하는 중심현상(P-1)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사후감사 면책제도 미비 및 상급기관 가이드라인 부재(C-1)라는 중재적 조건이 작용하면서, 실무진은 리스크 회피를 위해 안전한 일반소요 우회(D-1), 과도한 ROC 고도화(D-2), 자발적 증 서류 추가 요구 등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취하게 된다.

그 결과 Fast Track 본래의 신속성을 상실하고 일반소요로 회귀 · 전환(E-1)되어 제도 신뢰도가 저하(E-2)되는 최종 귀결로 이어진다.

---

17) 시범사업과의 차이: 시범사업은 성능입증시험 적합 시 긴급소요로 연결되나,신속소요는 사전 성능입증 없이 소요를 결정하므로 군의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음.

18) 사업타당성조사 제약: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시 기획예산처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으로 인해 ‘5년 이내 전력화’ 요건 충족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www.kci.go.kr

4.3.3 4대 핵심 인과경로

첫째, 감사・행정 부담형 경로(Audit & Administrative Burden Path)[19]는 사후 감사원 감사 우려와 '결정 후 국회 상임위 보고' 등 정치・행정적 리스크가 실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로이다. 사후 면책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행정적 안전장치를 확보하고자 규정상 생략・조정 가능한 절차와 증빙 서류를 자발적으로 복원・추가 요구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기획이 장기화되고 Fast Track의 신속성을 상실하게 된다.

둘째, 기술 불신・성능 격차형 경로(Technology Skepticism Path)[20]는 민간 첨단기술의 TRL(기술성숙도) 불확실성과 군의 높은 요구수준 간 격차에서 출발하는 경로이다.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한 의구심과 기술 실패 책임이 부담스러워 신속소요 안건임에도 기존 무기체계 수준의 고사양 ROC 및 빈번한 소요 수정을 요구하게 되며, 이로 인해 검토 기간이 장기화 되고 기존 일반소요 절차로 회귀하게 된다.

셋째, 제도・예산 격리형 경로(Procedural & Budgetary Estrangement Path)[21]는 소요 의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받쳐줄 전용 예산 트랙이 부재한 구조적 한계에서 발생한다. 기획예산처의 정기 예산 심의 주기와 연계되면서 사업타당성조사 회피 등을 위해 사업 규모를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시제품 개발 위주로 축소 추진하게 되며, 그 결과 소요가 결정되더라도 대규모 양산 및 실질적 전력화로 이어지지 못해 민간업체 참여 유인이 소멸한다.

넷째, 책임 회피・유예형 경로(Responsibility Shifting Path)[22]는 상급기관의 면책 가이드라인 및 정책적 책임공유 체계 부재로 나타나는 경로이다. 실무진과 심의위원회가 불확실한 신속소요 결정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기 위해 보완 요구를 반복하며 의사결정을 유예하거나, 리스크가 없는 보수적인 일반소요 위주로 결정을 추진하여 최종 소요 미연계(9건 중 1건 결정)로 귀결된다.

---

19) "신속소요는 특정 업체의 소요를 신속하게 결정해 주는 구조라 사후 감사원의 표적이 되거나 특혜 시비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큽 니다. 그리고 일반소요에는 없는 결정 후 국회 상임위 보고 역시 부담스럽습니다……중략."(참여자 인터뷰 진술 중)

20)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에 검증을 거치지 않은 신기술이다 보니 기술 실패 책임이 부담스럽습니다. 소요결정 기관이나 소요제기 기관이나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 일 겁니다. 결국 리스크를 줄이려고 기존 무기체계 수준의 ROC를 요구하거나 소요 수정을 반복하게 됩니다……중략."(참여자 인터뷰 중)

21) "신속소요로 과제가 선정되어 군사적 활용성이 입증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3축, 로봇, AI등 첨단전력 위주로 소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포션(통합소요기획결정 시 최소 1~2개 과제 정도)을 강제로 할당해 주지 않는 이상 소요로 연결되기는 매우 제한 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짧은 시간 내 전력화를 완료 해야 함으로 500억 미만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중략."(참여자 인터뷰 진술 중)

22) "업체가 개발한 소요를 시범도 해보지 않고 소요결정 하는 신속소요는 매우 부담 됩니다……통합소요기획제도 신설로 신속소요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신속소요 보다 위험성이 적은 신속시범사업을 훨씬 선호합니다…중략." (참여자 인터뷰 중)

www.kci.go.kr

V. 결론

본 연구는 국방 신속소요(Fast Track) 제도가 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속소요 결정 사례가 저조하고, 제기된 안건이 기존의 일반소요 절차로 회귀·전환되는 메커니즘을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론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5인의 국방 전문가 심층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5.1. 연구 결과

첫째, 개방코딩으로 182개 개념, 44개 하위범주, 12개 최종 범주를 도출하고 축코딩의 패러다임 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감사·규제 및 국회 보고 부담이 인과적 조건으로, TRL 불확실성과 예산 반영의 보수성이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여 '신속소요 결정 사례 저조 및 제도의 차별성 상실'이라는 중심현상을 야기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선택코딩을 통해 전체 현상을 관통하는 핵심범주로 "책임 회피적 위험 대응에 의한 신속소요의 일반소요화"를 도출하였다. 이는 감사 지적, 특혜 시비, 기술 실패 위험에 직면한 실무진과 심의기구가 Fast Track의 재량권을 포기하고 가장 안전한 일반소요 절차로 보수적 후퇴를 선택하는 방어적 대응 메커니즘이다.

셋째, 이러한 일반소요화 현상을 유발하는 4대 핵심 인과경로를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 감사·행정 부담형 경로(Audit & Administrative Burden Path): 사후 감사 우려와 국회 상임위 보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규정상 생략 가능한 절차와 증빙 서류를 자발적으로 복원·추가 요구함으로써 기획이 장기화되고 신속성을 상실하는 경로이다. 기술 불신·성능 격차형 경로(Technology Skepticism Path): 민간 기술의 TRL 불확실성과 군의 높은 요구수준 간 격차로 인해 고사양 ROC 및 빈번한 소요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서 검토 기간이 지연되고 일반소요로 회귀하는 경로이다. 제도·예산 격리형 경로(Procedural & Budgetary Estrangement Path): 전용 예산 트랙 부재 및 기획예산처 정기 심의 연계로 사업을 500억 원 미만의 소규모로 축소 추진하게 되며, 대규모 양산 및 실질적 전력화로 이어지지 못해 민간 유인이 소멸하는 경로이다. 책임 회피·유예형 경로(Responsibility Shifting Path): 면책 가이드라인 및 책임공유 체계 부재 속에서 결정 책임을 피하고자 보완 요구를 반복하여 의사결정을 유예하거나 보수적인 일반소요 위주로 결정하여 최종 소요 미연계(9건 중 1건 결정)로 귀결되는 경로이다.

5.2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 도출된 4대 핵심 인과경로의 구조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신속소요 결정을 실효화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4대 맞춤형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www.kci.go.kr

첫째, 감사・행정 부담형 경로에 대응하여 사후감사 면책요건 명확화 및 결정 후 국회 상임위 보고 절차의 전면 생략이 시급하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기준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연계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소요에는 없는 '결정 후 국회 상임위 보고 절차'를 법령 개정으로 전면 제외함으로써 실무진의 행정적・정치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즉시 사업에 착수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술 불신・성능 격차형 경로에 대응하여 유연한 ROC 적용 및 군・민 합동 TRL 간이 검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 초기부터 고사양의 완벽성을 요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최소 요구성능으로 우선 획득한 후 성능을 고도화하는 '진화적 ROC' 개념을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전문기관 중심의 실시간 기술 검증 지원 체계를 표준화하여 군의 기술성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제도・예산 격리형 경로에 대응하여 국방 신속획득 전용 예비비 및 획득 예산 트랙을 신설해야 한다. 소요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기 예산심의 주기와 연계되어 사업이 정체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한 '신속획득 특별회계/예비비'를 운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요 의결 즉시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화로 이어지는 예산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책임 회피・유예형 경로에 대응하여 정책적 책임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개별 실무자나 심의기구에 의사결정 리스크가 집중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상급기관 및 정책 부서의 면책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 한다. 기술적・행정적 불확실성이 내재된 신속소요 안건은 개별 담당자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정책적으로 일괄 결단하고 책임지는 Top-Down식 승인 및 책임 공유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5.3 학술적・정책적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신속소요 결정 과정의 실증적 저해요인을 근거이론을 통해 조명했다는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다만 15인의 전문가 심층 인터뷰 중심의 질적 연구로 수행되어, 도출된 범주 및 인과경로 간 영향력 크기를 수치적으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패러다임 요소와 4대 인과경로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국방 유관기관 및 방산기업 등 광범위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SEM)이나 계층화 분석(AHP) 등 양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Reference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Sage Publications.

Choi, S. B. (2017). *Ten-year evaluation of defense capability development and a study on comprehensive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Corbin, J., & Strauss, A. (2014).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4th ed.). Sage Publications.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2025). *Measures to improve the fast-track system for rapid capability fielding*[Policy Report].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Aldine Publishing.

Hong, S. S. (2025). *A study on measures to develop the defense budgeting system: Focusing on drone acquisition*.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Huh, J. Y., & Kwon, H. W. (2016). An exploratory theorization study on factors hindering 'work-life balance': Application of grounded theory to central government civil servants in Sejong City.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4(2), 1–30.

Kang, S. R., & Kim, H. G. (2005). A knowledge transfer theory for I and We: 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psychological state of organizational member who transfers knowledge. *Korean Management Review*, 34(3), 739–781.

Kim, I. H., & Kwon, H. W. (2025). Exploring obstacles and response strategies for digital-based administrative innovation in Korea: Application of grounded theory to central government civil servants. *Korean Policy Studies*, 25(4), 455–462.

Lee, J. H. (2025). *A study on institutional establishment measures for advanced system acquisition*.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Lee, N. I. (2014).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Hangilsa, 289–294.

Lim, G. E. (2026).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teachers' experiences of Christian teaching.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 57(2), 1–29.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2026). *Directive on defense capability development* (MND Directive No. 3814, Art. 14-2).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MPB). (2026).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guidelines* (MPB

www.kci.go.kr

Directive No. 59).

Nam, K. H. (2023). *Measures to reform the defense software acquisition system*.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Nam, K. H., Park, M. U., Kim, D. B., & Hwang, I. B. (2026). *Measures to establish an advanced force acquisition system*.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Park, Y. O. (2022). A study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defense capability development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fense Technology*, 15(2), 45–62.

Republic of Korea. (2025).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Act No. 21065, Art. 15–2).

Republic of Korea. (2026).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Presidential Decree No. 35947, Art. 22-2).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2nd ed.). Sage Publications.

Weick, K. E. (2007). The generative properties of richness.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0(1), 14–19.

Yang, Y. C. (2020). *Measures to establish a Korean mid-tier acquisition system*.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Yoon, J. S. (2013). Review of domestic academic works related to qualitative data analysis stages and grounded theory applicatio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4(1), 89–104.

원 고 접 수 일 2026년 09월 17일
원 고 수 정 일 2026년 10월 01일
게 재 확 정 일 2026년 10월 02일

www.kci.go.kr

IDAP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INSTITUTE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JAMS JOURNAL OF ADVANCES IN MILITARY STUDIES

2026, Vol. 9, No. 2, 97-117.

https://doi.org/10.37944/advmil.9.2.202610.005

신속소요(Fast Track) 결정 저해 요인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을 중심으로

양명희* · 정석재 · 김장엽*****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방 신속획득(Fast Track)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신속소요 결정 사례가 저조하고 기존 일반소요 절차로 회귀·전환되는 메커니즘을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론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15인의 국방 전문가 심층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신속소요 지정 기준의 모호성과 감사·규제 부담이 인과적 조건으로, TRL 검증 불확실성과 예산 반영의 보수성이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여 '신속소요 결정 사례 저조 및 제도의 차별성 상실'이라는 중심현상이 야기됨을 규명하였다. 선택코딩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 범주는 "책임 회피적 위험 대응에 의한 신속소요의 일반소요화"이다. 이는 실무진과 심의기구가 사후 감사, 특혜 시비, 기술적 실패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적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Fast Track의 재량권을 포기하고 가장 안전한 일반소요 절차로 보수적 후퇴를 선택하게 되는 방어적 대응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현상은 (1) 감사·행정 부담형, (2) 기술 불신·성능 격차형, (3) 제도·예산 격리형, (4) 책임 회피·유예형의 4대 핵심 인과경로로 발현됨을 검증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감사 면책요건 명확화 및 소요결정 후 국회 상임위 보고 절차 전면 생략, 유연한 진화적 ROC 적용 및 TRL 간이 검증 패스트트랙 도입, 신속소요 전용 예비비 및 예산 트랙 신설, Top-Down식 정책적 책임공유체계 구축을 맞춤형 정책 대안으로 제안한다.

주제어 : 신속소요, Fast Track, 근거이론, 일반소요화, 면책제도, 정책적 책임공유, 패러다임 모형

* (제1저자) 합동참모본부, 서기관(광운대학교 박사과정), mhyang45@gmail.com, https://orcid.org/0009-0000-4496-204X
** (제2저자) 광운대학교, 교수, 경영학부, sjjeong@kw.ac.kr, https://orcid.org/0000-0001-7081-7567
*** (교신저자) 광운대학교, 교수, 방위사업학과, jykim1670@kw.ac.kr, https://orcid.org/0000-0001-7258-3928

www.kci.go.kr